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8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11시04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1시05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기초실장 오경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3권 90페이지 국가보훈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8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국립이천호국원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상경비에 대해서 이동 카트 구매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에 이미 편성돼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이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 694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국립묘지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26년 타당성 재조사 및 후속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비, 감리비 등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횡성호국원 조성이 감액하더라도 일정은 변경 없이 잘 추진이 가능한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계약 절차에 일부 반영이 필요한 이 정도만 가지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나중에 공사하는 데 공사비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송기현 위원 이거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횡성·원주에 계신 분들이 대전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횡성호국원이 되면 횡성호국원으로 이장을 하면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참배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 묘지법에는 묘지 간 이장은 안 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속초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대전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 달라는 애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아무튼 현재 법에 이장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게 쓸데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국민 편익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황성호국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런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송기현 위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같은 등급끼리는 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편의가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립묘지조성 10억 원 감액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 후 증축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99억 2000만 원은 당초 계획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이나 설계 지연으로 인해 26년 3월로 착공이 연기됐으므로 26년 공사비 중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번 참전기념행사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각 명비에 어떤 참전유공자의 존함이 새겨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2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사업은 2016년도부터 명비를 건립해 온 사업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잘 보완하도록 하고 26년도에도 건립하는 곳이 지자체 6곳 또 학교 5곳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이걸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런데 잘하겠다고 했고, 기본은 희망하고 있는 지자체와 학교들이 11개소가 있으니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가 잘한다는 전제로 감액을 하지 않고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냥 철회하고…… 원안 유지하자는 정부 측 의견대로요?

○박민규 위원 예.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소영 위원 그러면 철회가 아니라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원안 유지, 원안 유지입니다. 철회가 아니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용만 의원님이, 저희 정무위원인데 그쪽에서도 이것을 원안 유지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민규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차관님.

○소위원장 한병도 참전기념행사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92페이지 5번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내역사업인 활성화사업비는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45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설계 공모하는 방법 저 정도만 동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지요? 표결로 이루어졌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에서 전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형두 위원 전체 동의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45억 94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3페이지 6번 보훈문화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및 포항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의 사업 지원을 고려하여 35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창원은 내년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포항은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억 41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안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4페이지 7번 생활조정수당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에 대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도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2개월분 23억 6300만 원 감액의견을 그리고 일부 감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2개월분 감하는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감액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5페이지 8번 등록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사업에 대해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이 저조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작용 IC국가보훈등록증 추가 발급 구매액 중 2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상임위안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6페이지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형평성 원칙에 반하므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또 문헌 발간 또 후손들에 대한 인재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유사한 보훈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운영비 지원과 단체별 선양활동이 있는데 이 16개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전부

379억입니다. 이 중 광복회에 8억 원이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인데 광복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운영비 약 26억 원, 선양행사 지원비 약 8억 4800만 원 해서 총 34억인데 운영비는 다른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양행사 지원비만 올해의 경우는 본예산에서 4800만 원이었는데 무려 1600%가 증액된 안입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 행사였다면 지난해에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맞는데, 광복 80주년의 취지에 비추어 볼 경우에, 앞에서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에 맞지 않고……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역시 이 똑같은 사업이 지난 2회 추경 편성 당시에도 정부안으로 8억 원 신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같은 경제 대응 목적이었는데도 추경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편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광복회 예산편성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광복회가 특정 대통령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스스로 지금 오해를 자초한 행위를 했고 이 예산 역시도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지난번에 주고 또 주는구나라는 예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할 소지가 큼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 정책 목적과 무관한 선심성·보훈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24년도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세부사업들이 구체성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했던 언론보도가 있었던 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론보도가 25년 5월 23일 자였는데 관련된 보도가 잘못됐다는 정정보도도 25년 11월 6일 날 나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랑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삭감이 아닌 국가보훈부의 의견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에 관련된 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9페이지입니다.

10번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내역사업인 광주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공사 지연을 고려하여 19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광주보훈병원은 현재 응급실과 수술실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긴급·긴급한 사업이고 공사는 26년 5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은 조달청의 맞춤서비스를 통해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본공사

비 또 철거 공사 또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가시설물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보훈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훈부 보고에서 보듯이 현재 기준 설계 완료가 2026년 2월로 8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착공 역시 내년 5월로, 완공은 내후년 11월로 계획이 수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일정이 당초보다 크게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를 연차별 재분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편성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사비를 과도하게 앞당겨 편성한다고 해서 공사를 더 할 방법도 없는데, 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약건대 이 문제는 어떤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연된 설계 완료, 공사 착공, 완공 역시도 지금 발표한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 뻔히 불용이 예상되고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지금 빠듯한 예산에서 무리하게 올해 편성하겠다는 보훈부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편성해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최형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관련돼서 현재 그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축 공사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사비 외에도 철거 공사뿐만 아니라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 가설비 비용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공사 비용들이 부족하면 실제로 병원 정상적 운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의 운영과 증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로 봤을 때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내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조계원 위원 그 부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견 있어서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1번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 등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에 대해, 채상병 특검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한 인사가 소환 당일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행사에 참석하여 상을 받았음에도 국가보훈부는 후원만 하였을 뿐 시상자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일관하였는데 국가보훈부에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후원만 하는 행사에 국고를 낭비할 이유가 없으므로 1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 사업은 한미동맹재단이나 주한미군전우회에서 2017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한미동맹과 관련된 세미나 또 한미동맹 공고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보훈부에서 원안 유지를 희망드렸지만 정무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뒤에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1억 4500을 증액시켜서 25년도 예산 수준으로 가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부처 의견은 뭐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원안 유지를 희망하지만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안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1페이지 12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예우 사업은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 드리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명패 지급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국가보훈부 명패도 2019년도부터 그분들 명패를 달아 드리던 사업인데 현재 지금 재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연말에 한 3000개 정도 남고 또 평소에도 한 9000명 정도가 등록하기 때문에 1만여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그런데 보훈부 의견에 비해서 관련돼서 계속 통계는 기본적으로 감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정 부분이라면……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듣고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저도 장인어른이 국가유공자인데, 꼭 명패가 필요합니까? 아니,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요즘 아파트고 뭐고 이래 가지고 교회 명패 붙이고 이것 명패 붙이고, 이것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보훈부에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나는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것을 붙여야 국가유공자고 이것을 안 붙이면 국가유공자 아니냐…… 이것보다도 자신이, 자기 가족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오히려 예우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명패 붙여 가지고 뭐 하겠어요?

원래 옛날에 우리 명패 문화가 집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그것은 단독주택 할 때고 지금은 거의 아파트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예전 분들은 다 달아 드렸고 지금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만 안 드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9000명 정도에 대한 명패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 박민규 위원님 취지가 현재 재고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제로 소요될 만한 게 지금 예산만큼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보훈부 안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실제 내년에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를 잘 추산하시고, 지금 있는 재고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가지고 감액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는지 여부를 따져 보세요.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건 감액의견을 고려해서요, 추계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규모는 차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중복성이 크고 일회성 행사를 위해 3억 3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므로 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24년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됐는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24년 예산 수준인 6억 1700만 원만 유지하여 최소한으로만 진행되도록 3억 9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히어로즈패밀리 사업은 24년도에 시작했는데 전몰·순직 소방가족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국가가 부모가 되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상임위안의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상임위안으로 1억 40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고령독거유공자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보다는 AI 장비에 의존한 비인간적·소극적 안부체계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5억 5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3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고독사 관련해서는 실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혼자 계시면, 언론에 다른 고독사보다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보다는 좀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들이 겹치지 않고, 아까 AI가 좀 비인간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AI뿐만 아니라 고독사위험군의 자택도 계절적으로 방문도 하고 혹한기에 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하는 등 그걸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AI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예산을 덧붙인 것인데 실제로 지금 복지부에서 이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서 ICT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했는데 SK텔레콤 같은 데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량도 감지할 수 있고요.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대응하는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서비스를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이 AI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중복투자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에서, 이미 감액의견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3일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3일장이 아니라 당장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도 출동하는 서비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일간 공백을 두어서 AI로 감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보훈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3일장이라는 것은 이미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적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번고를 당해서 24시간 내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이런 참…… 나는 정말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령의 독거유공자가 외로움과 단절 속에 이런 상황은 참 그렇지만 기술의 진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AI 이름 붙여 가지고 3일간…… 이것 감액 관철해 주십시오

오. 이것은 정말 보훈부가 너무 기술을 핑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쓸데없는 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것 만약에 알려지면요 보훈복지 혜택에 놓인 어르신들께서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차관님, 이 제도를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복지부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 지금 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리하는 그 인원보다는 우리 보훈이라는 것은 늘 복지 플러스알파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고 고독사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관리하는 문제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 주셨는데 실은 제가 현장에 많이 가 봤는데 그 부착을 냉장고나 문에다 하기 때문에 3일은 여기 표현이 된 거고 곧바로, 하루 만에 연락이 안 오면 응급출동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기관 간의 어떤 칸막이의 사례가 자꾸 쌓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자치단체하고 복지부하고……

그래서 그 관리 대상에 이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그분들을 추가를 해서 오히려 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두텁게 관리한다는 말씀이 자치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또 보훈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별도로 하는 그 체제보다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한 분만 더 들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이것 문열림센서를 통해서 1일간이지요, 1일간 활동 감지가 없을 경우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렇지요. 문 열림 또는 냉장고에 붙여서……

○조계원 위원 냉장고는 3일 안 열고……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그것도 1일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도 1일이에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조계원 위원 여기 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안부확인서비스도 독거 취약계층 이쪽하고, 그러니까 복지부·지자체의 복지 서비스하고 수혜자가 겹치지 않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겹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복되지 않는 걸로 진행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왜냐하면 보훈가족들은 실은 고독사도 문제가 되지만 국가유공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언론에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사회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하는 거고, 저희가 1인 가족 전체 대상이 한 5만여 명 되는데 상임위원

회에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두텁게 1인 가족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 질문 하나만 해도……

○소위원장 한병도 예, 질문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게 센서를 부착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센서의 알람이 울리게 되면 이 정보는 어디로 가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19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19로 가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119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는 지금 3300명인데요. 전체 1인 가구는 한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3300명에 대한 가격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노종면 위원 중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거랑 그 기준이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조금 더 두텁게,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더 넓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지금 최형두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를 가지려면 기준 기간이 짧아야 되는 거기는 한데 또 지금 현재 문 밖으로 나가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게 소방으로 신고가 가면 또 업무 과중이 돼서 또 다른 위급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은 안 생기는 건지, 그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건지, 하루 동안 센서가 감지가 안 되면 정말 위급 상황으로 볼 만한 건지……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가 실은 올해 1년 동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담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고독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범을 이미 1년 해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하루면 적절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송기현 위원 차관님, 복지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보훈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부가 하는 것은.

그런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정도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연세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심지어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대가 넘으신 분들이라서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 굉장히 따로따로 관리가 안 되시는 이런 분을 잘 해서 보훈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AI를 이렇게 써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전수조사하는 것하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하고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하고, 그러니까 급히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하고 아니면 그냥 관리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분하고 이런 정도는 다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현재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을 위험군과 의심군으로 나누어 뒀고요. 미리 실태조사도 했고 아까……

○송기현 위원 다 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1인 사시는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상임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

○노종면 위원 한말씀만 더 보낼게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인데 AI 센서 부착해 갖고 신호 가는 게 그게 무슨 AI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것을 종합했을 때 이것은 위험한 신호다라고 AI가 판단하는 것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그것도 AI인가라는 의문은 드는데 AI 사업다움을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기록에 좀 남겨 두려고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조정훈 위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등등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 중에 지금 혼자 사셔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덜 두텁게 보호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민주당, 어제 계속 보편적복지로 가셨잖아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백번 양보해서 국가유공자가 고위험군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인정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그 안에서 하는 게 맞지, 다른 고위험군하고 똑같이. 국가유공자라고 독거노인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국가 운영의 철학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AI 등등, 3일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이런 제도를 던질 수 있고 제안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수용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독거노인 한 분 한 분 다 어려운 분이잖아요. 고위험군이 꼭 국가유공자만 있겠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AI 기반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지금 상용화되어 온 것이 제가 볼 때도 5~6년, 6~7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든 민간이든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독립유공자 독거노인 대상으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지금 밖에서는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시스템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두터운 서비스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입니다.

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변상금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등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순애기금 재원부족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안에 동의드립니다.

다만 이게 친일재산의 특성상 무단점유를 했는지 행태 또 거기에 인적사항도 파악해야 되고 또 부과와 징수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상임위안에 동의는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국가보훈부 마지막입니다.

토지매각대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중 국가 귀속분을 매각 후 그 대금을 수납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토지 매각으로 순애기금 재원부족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26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귀속재산이 1597이고 잔여재산이 한 818필지입니다. 그런데 818필지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곳이어서 현재 매각이 제한되는 곳이 448필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무위에서도 26년도에 감액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 항목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게 맞나요? 왜냐하면 저희 소위 자료에서는 상임위가 삭제되어 있어 가지고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상임위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때도 답을 저희가……

○이소영 위원 논의가 아니라 의결이 된 게 맞나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의결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석님께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런데 이것은 수입 항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임위 동의를 받거나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상임위 결정 내용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상임위 의결된 것으로 방금 차관이 답변했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의결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안 적혀 있는데요.

○송기현 위원 여기에 빠진 걸로 돼 있어요.

○이소영 위원 처음에는 상임위 의결이 있다고 반영이 됐다가 이게 수정해 주신다고 해서……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의결됐습니다.

다만 의견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요, 저희 행정적으로 확인할 부분이어서……

○노종면 위원 1번만 의결한 것 아니에요, 1번만?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그 상임위 의결을 했냐고요.

○노종면 위원 1번은 의결하고 2번은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때 그것을 의결할 때 차관님이 안 계셨나?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최종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체 의결했어요?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임미애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대식 위원 전체 의결했다는데?

○소위원장 한병도 답을 못 하셨잖아.

(「지금 다시 답을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훈부차관님 말씀으로는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예,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왜 자료가, 이게 약간 정정이 된 거지요?

○조계원 위원 실수했나 보지.

(「확인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위원 이것은 보류하고 확인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 보류해 놓고 확인하고 처리합시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보훈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조소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3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이 1억 1000만 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960만 원임을 감안해서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행강제금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잡으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한다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사업 4건,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높고 주요 정책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임위는 1억 원 감액 의견을, 예결위에서는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칸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주무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이 심각하므로 현재로서 무의미한 홍보마인드 제고, 언론기관 간담회 비용, SNS 이벤트 등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요정책 특별홍보 영역은 저희가 지금 패스트트랙에도 들어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부처가 통합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부처에 고른 국민 권익을 위한 정보 홍보가 있어서 주요정책과 관련된 홍보를 하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홍보 기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SNS 이벤트나 라방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침에 근거해서 영상제작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홍보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들은 다 저희가 주의 깊게 듣지만 저희 상임위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1억 원 삭감해 달라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주요정책 특별홍보가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상임위에서 한 것은 액수만 줄인 거지 이 사업 자체는 살려 준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기웅 위원 8000만 원 살렸는데 차별성을 제가 언뜻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권익증진 정책홍보라든가 기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하시면 안 되고 새로 이렇게 뭘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지금 주요정책 부분과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세 가지 정책을……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홍보 예산이 돼 있으면 권익증진 정책홍보에서는 그걸 못 하나 이거지, 그 사업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본 홍보는 그대로 똑같고요. 그런데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김기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니까 홍보 행태가 달라진 겁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홍보 행태가 달라도 앞의 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8000만 원 넣어서.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아니, 그게……

○김기웅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산 액수를 거기 넣어서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언뜻 이해 못 한다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존의 홍보는 일반 수용비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용역 항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웅 위원 밖에 주겠다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김기웅 위원 밖에 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밖에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왜 외부용역을……

그런데 저도 용역 주고 하지만 1억 8000을 외부용역 주는데 8000만 원으로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8000만 원 받고 이걸 할 용역회사가 누가 있겠냐고. 기본이 몇억 넘어가는 게 기본 홍보용역이지 8000만 원 받고 어느 회사가 이걸 홍보한다고 1년 뭘 하겠다고 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1억 8000만 원 올렸던 것이지만 감액을 하라 하셔서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기웅 위원 아주 좋습니다. 전문성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것 홍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 요원을 가지고는……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앞엿것도 다 용역 주면 좋지, 저도 일해 봤지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앞엿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기웅 위원 저는 왜 이걸 외부에 줘야 되는지 언뜻 잘 납득이……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위원님, 저 권익위원회 대변인인데요. 잠깐 보완설명……

○김기웅 위원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일단 일반용역비로 구성을 한 것은 일반용역비 내역이, 전문적인 행사 운영 관련한 게 일반용역비로 짜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정과제라든지 전반적인 주요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행사와 더불어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엮어서 같이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일반용역비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이벤트를 한번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예, 이벤트라든지 문화행사. 그렇게 해서 특히 청렴교육 의무화 과정이 있습니다, 초중고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한 문화행사를 해야 더 효

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지금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 홍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3개 부처잖아요.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이 3개의 부처가 하나로 모여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됐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정재창 그것도 보완설명이……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이야기예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근무를 했잖아요. 부위원장으로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8000만 원 갖고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 그게 실적이거든요. 국가, 정부 것을 우리가 했다 하는, 적자를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권익위원회가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 것을 홍보하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스로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한 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 중입니다.

○송기현 위원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저는 권익위에 근무 안 해서 모르겠는데 홍보마인드 제고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한 것 플러스해서 일종의, 김남근 위원 등등이 제기한 4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올해는 열심히 권익위원회 자체에서 자정 노력과 다시 세울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4900만 원도 같이 더해서 1억 4900만 원 감액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1억 4900요?

○송기현 위원 예.

○이소영 위원 상임위의 1억하고 밑의 홍보마인드 제고 이런 4900만 원 이 두 가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상임위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것 합쳐 가지고 그것 감액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제기한 1억 8000 씩 없애 버리고, 소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이소영 위원 아니, 1억 8000 중에 1억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박형수 위원 보류, 보류.

○이소영 위원 이렇게 작은 것은 결정하고 가시지요.

○박형수 위원 큰 걸 결정해야지 작은 걸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억 8000 다 감액해, 그냥.

○이소영 위원 그러면 하세요. 1억 8000 다 감액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5페이지 2번 청렴권익 국제교류입니다.

내역사업인 통·번역비, 행사경비 등 기타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체 사업 예산은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수용비는 1200만 원 증가하고 통역사 고용 부담금은 전년 대비 급증하였는바 타 사업의 일반수용비 기준 및 고용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적해 주신 고용부담금 단가네요 올해 잡힌 것은 공무원통역사 1인과 기간제통역사 1인을 평균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이것은…… 기간제통역사가 그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되지 않고, 왜냐하면 기간제통역사의 임금이 낮다 보니까 평균한 액수가 낮았던 거고요.

지금은 공무원통역사 1인이고 4대 보험 법정비율 그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계상이 된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해 달라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초빙강사료 390만 원과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교육 강사료 83.5만 원과 같이 같은 청렴 강사료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강사료 증액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말씀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교육 강의라는 게요, 초빙강사료는 저희 청렴연수원 내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교육은 초중고 미래청렴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즘 바빠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명강사이거나 또는 공연형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해량해 주시길 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원안 유지지요?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4번 고충민원 조사활동입니다.

내역사업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도 도입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반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저조한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여건도 열악하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기초지자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를 합치면 전체가 243개인데요. 지금 현재 10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이신 부산·인천·경남·경북, 광역도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권익위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제가 감액 신청했는데 지금 뭐 답변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년 동안 예산 받았으면 최근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맞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 위원님.

○박민규 위원 어쨌든 간에 감액 요청했던 이유인데 부대의견으로 좀 더 노력하라는 정도로 하고 제가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마지막 사업입니다.

5번 기관운영 기본경비(비대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의 책임 회피, 거짓 증언 등과 국민권익위의 신뢰 하락 주도 및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00만 원 감액의견과 위원장 업무추진비 중 10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예, 주신 말씀 저희가 정말로 체감하면서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임차료 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로 임차료 감액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의논이 되었고요. 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정무직이 4개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자체가 위원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사람의 정무직을 가진 업무추진비가 타 위원회와 비교를 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헤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임차료가 얼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임차료 7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의견이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2300만 원이 임차료 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6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지금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감액 이랬는데 여기에는 정무직이 네 분이 있지요? 네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권익위원회, 왜냐하면 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 지금 부처 의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차료 7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권익위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민권익위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서정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0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밝혀져 추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1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이어서 710억 3100만 원 증액의견과 110억 61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안이요?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판단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과징금 부과 실적이 역대 최대입니다. 최고 많았었던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이 1209억이거든요. 제가 지금 증액 요구한 게, 세입 증액이 710억이기 때문에 제 기준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박민규 위원님 안대로 710억 증액하는 결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지금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건데 확정된 수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인데 이 710억보다 추정금이 여러 이유로 적다, 뭐 돈을 안 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상으로? 왜냐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지출구조를 또 갖출 텐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지금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710억은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상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이렇게 잡게 되면 내년도에 충당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손이 되고요, 사실상 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609억 원……

○조정훈 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으로 왔는데 추정 과정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700억, 600억의 추정금을 추정하면 또 흑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그것은 세입으로 잡되 다른 징수한 액수로 해서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국고로 귀속되는 거지요, 개보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회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예산이, 작년에 정수 결정액이 388억이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67%를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정무위 상임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합의해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10억을 추가로 증액한 안이기 때문에 609억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려서 책정한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처분이 됐다고 해서, 과징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110억을 증액한 609억을,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을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그러면 실적률까지 포함한다면 정무위 의결안에 동의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상임위안 110억 원 증액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지막 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위원회홍보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높고 안정적 수준으로 단순한 대중 홍보예산 확대는 실질적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액분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했던 원안 3억 5700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홍보비를 보니까 2배를 늘렸어요. 중점 홍보 용역비가 예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으로 올렸고요, 보호문화 기반 조성 용역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홍보비를 2배씩 올릴 정도의 이슈가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SKT, KT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유출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 홍보예산은 정부부처, 장관급 위원회 중에 가장 적은 2억 5000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권익위가 14억이었습니다. 금융위가 8억 8000이고요. 너

무 적게 편성돼 있었고 1년에 솜품 영상 월에 1건씩밖에 제작을 못 합니다.

유출이 많아질수록 국민이나 기업체에게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꼭 좀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다시 하나 더 물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홍보가 부족해서 유출되나요, 아니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때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의 부족도 있습니다만 국민과 기업체가 해야 할 일을, 안전수칙을 보다 지킨다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위원회에서 24년도에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를 서베이해 봤더니 국민의 92.7%, 청소년의 95%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위원님, 통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가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식도가 높은 것과 실천의식이 높아지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게 정부 원안을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홍보, 무슨 SNS에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업체라든지 해당 기관들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의 탄탄함을 더 강화해야지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거꾸로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가 인식이 낮아서 개인들이 이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때는 홍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각각의 소비자 개인들은 굉장히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호해야 될 기관이나 대형 업체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그것을 뒤늦게, 사고가 나더라도 뒤늦게 신고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정보를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업체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체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홍보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비해 홍보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비록 증액의 폭이 컸지만 정부 원안대로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조계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이미 상임위안에서는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인 정보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보호해야 될, 기술적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분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상임위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 유지를 했나요? 상임위안을 수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지난주 논의할 때 저희도 증액을 요청했고 상임 위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몇 분 의견이 있었고 감액은 절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따로 논의하고 정부가 요청했던 안 그건 최소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그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요청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증액까지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작년에 1억이었던 게 2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요, 이 해당되는 예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3500만 원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용역비가 2배가 된 건데, 작년에 안 만들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채널을 여러 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룬폼 영상이라고 그래서 5분 짜리 이상 되는 이런 영상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의 지우개 서비스라고 그래서 내가 올린 잘못된 영상 지우는 것 이런 것들은 룬폼으로 가는데 2편 밖에 못 했고요. 그리고 숏폼, 몇십 초짜리, 이삼십 초짜리……

○**송기현 위원**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그것을 1년 내내 16편밖에 못 했습니다, 월에 1.5편. 이러다 보니까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유출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마다. 예를 들면 추석 때 택배송장 같은 것 안전하게 지키는 것 매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송기현 위원** 오케이. 그래서 올해는 그 2배를 했어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부분을 추가로 해야 돼서 1억이 늘어났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영상, 룬폼 영상을 작년 2배 해서 4편을 추가해서 6편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고요. 숏폼 영상,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영상을 8편을 늘려서 25편, 그러면 월에 2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너무 돈이 없어서 인플루언서를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는 데 썼었는데 구독자 100만 이상 하려다 보니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것도 2편 했던 것을 2편 늘려서 4편을 해서 전년 대비 한 70% 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1억이 꼭 더 필요합니다.

○**송기현 위원** 추가되는 1억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헛수나 그것을 더 늘리고 내용도

새로운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내용을 새로운 것을, 전에 안 했던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보다 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까지만 듣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홍보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하려는 홍보 활동에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콘텐츠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용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정책 홍보 라이브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를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를 합니까? 라이브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정책 홍보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중심의 보호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찍어 가지고 홍보 영상으로 쓰는 겁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할 예산을 거기다 쓰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용어가 안 맞는데? 라이브는……

○김한규 위원 유튜브 라이브를 얘기하시는 거겠지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 서정아 제가, 대변인이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3억 증액하면서 상임위에서 이런 용도를 좀 더 확대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당초 1억에는 사실은 콘텐츠 제작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업계나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논의 과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참고삼아서……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듣고요.

○노종면 위원 제가 나름 유튜브 관련 활동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라이브라 함은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라이브 방송 이외에도 만든 콘텐츠를 스트리밍을 하면 그건 라이브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라이브,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홍보 효과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이정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견 아직도 이견이 상존을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것 다 동의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야당에서는 아직 감액의견을 주장을 하셔서요.

○노종면 위원 여전히 깎자는 입장이십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안녕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오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4권입니다.

3페이지 교육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과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사회복지부요원 운영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인건비성 경비인데도 22~24년 동안 매년 6억 원대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2억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2억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2번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유성 연수,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 낭비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0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 3번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와 4번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이 2개의 사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용은 서로 같습니다.

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사회정책협력관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 삭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무가 교육부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교육정책 총괄이라든지 인구정책 추진 총괄이 남아 있어서요 관련 예산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디로 넣는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2억 5400만 원 감액하고 500만 원 감액, 2건이 있는데 2건을 저희 부처의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정책협력관에서는 감액하시고.

○노종면 위원 제가 의견 낼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비목을 변경해서 했으면 문제없이 수용이 됐을 텐데 지금 그것을 놓치신 거지요?

기재부에 여쭙 봐야 될 것 같은데, 비목 변경 조건을 달아서 원안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은 자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차관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증감 연계 사업이어서 감액은 감액대로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요 증액의 필요성 여부는 증액할 때 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요, 확인해야 될 게……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증액에 대한 질의서가 들어와 있나요? 없으면 증감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노종면 위원님이 기재부에 질문하신 취지는 증액 질의서가 별도로 없는데도 불구

하고 이 비목 조정을 전제로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로 증액 질의서는 없는 거고 이 사회정책협력관은 폐지되어서 감액 의견이 합당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노종면 위원 감액 의견을 낸 제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려면 지금 상태로 전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원안 유지하자는 입장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깔끔하게 비목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면 더 좋겠다는 판단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대로 원안 유지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의견을 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내신 취지는 사회부총리 직위를 겸직하지 않으니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감액 의견이신 것 같은데, 교육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정책협력관이라는 게 사회부총리 직위 때 문에 하는 역할도 있지만 원래 사회정책협력관의 역할이라는 게 교육과 인재하고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총액 비대상과 대상 전액을 날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거나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 이 중에서 사회부총리 역할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금액 일부만 감액하시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가능하면 다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상태로 하면 전용이 불가피하니까, 지금 예산을 만드는 상황에서 전용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해서 여쭙본 겁니다.

○강승규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일단 지금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지 않으면서 사회정책협력관이 폐지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액 요청이 있는데, 감액 질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어설픈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이 예산은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부처에서도 2억 5400 감액에 대한 이 부분은 동의한다고 그랬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김대식 위원 다른 용도에서 조금 추가를 하든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니까 일단 빼고……

○노종면 위원 증액 의견을 지금 서면질의로 안 넣어 놔어요.

○김대식 위원 안 넣어 놔어요?

○노종면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런데 이게 조직 자체가, 사회정책협력관이라는 직제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그 예산을 다른 데서 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볼게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교육·인재 총괄 기능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립 등의 이런 업무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어디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업무를 사회정책협력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경비에서 더 플러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것, 제가 입장을 번복해서 일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일부 줄이는 게 불가능한 게요……

○**노종면 위원** 그것도 불가능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회정책협력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업무 기능은 살아 있는데 직제가 없어진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업무 기능이 살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요. 만약에 이런 업무 기능이 살아 있다면 기본경비라는 게 사회정책협력관 말고 기조실에도 기본경비가 있고 다른 실·국에도 기본경비가 포함돼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액 요구가 안 돼 있고요.

○**이소영 위원** 이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액 질의서가 안 들어와 있어도 여기에서 증액의 효과와 동일하게, 증액 질의서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행정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활동계획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관례에서…… 제가 그때 읽지는 않았는데 소위 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은, 그러니까 감액 자료에 없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떤 소위원님이 추가로 감액 의견을 내실 경우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 가능하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증액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이 추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면 증액 부분에 대한 얘기도…… 그런데 그 전제가 증액 의견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물론 그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업무가 과연 교육부에 계속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정책협력관이 없어졌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사회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정책협력관은 없어졌지만 이 업무를 다른 직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누가 담당하게 됐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회정책협력관에서 사회부처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고요. 그

중에 교육과 인재에 관한 업무도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업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것은 인재정책실 업무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있잖아요, 인재정책실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래도 부처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업무는 사회정책협력관에 있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이것 원칙대로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사회협력관이 폐지되었으니까 그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요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5번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은 불필요하고 이미 원격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 및 시스템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1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상임위의 1억 500만 원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상임감사, 감사실장의 외유성 의심 해외출장 등 기관 방만 운영에 대하여 재단운영비 증액분 및 해외출장비 등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1000만 원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소영 위원** 39페이지는 안 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9페이지 철회했습니다.

40페이지 3번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과기부의 AI 활용 교육사업, 교육부의 AI중심대학 사업, SW중심대학 사업 그리고 RISE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93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 사업은, 중복이라고 지적하시는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5억 사업은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차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의 AI중심대학 사업은 AI중심대학 10개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과기부의 사업은 SW중심대학 사업을 변형하고 추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사업은 전자공학과나 소프트웨어·데이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AI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이고 분야가 이공계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AI 활용능력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카이스트나 과기부에 분명히 충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카이스트의 AI 활용 고도화 사업은 일반인 상대이기 때문에 비전공 대학에는 관련이 없다 하면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역시 2조 1400억 원을 들여서 지역혁신중심 RISE 사업에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도 AI교육 개발을 비전공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또 10개교를 대상으로 AI중심대학을 255억이나 반영해서 양성하고 있고 또 51개교 대상으로 하는 SW중심대학에서 비전공자에 대해서도 SW융합교육을 AI로 전환해서 하는 만큼 여기에 92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AI 비전공자 교과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RISE 사업이나 과기부의 SW중심대학을 AI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다 충분히 반영되는데 과기부와 교육부가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일반 교과과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중복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당연히 사업 중복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인데 카이스트는 아예 대상 자체가 학교냐 아니면 일반인이나 그렇게, 그것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교육부의 AI거점대학 사업은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과기부의 AI

중심대학은 SW중심대,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이고요. AI 기본교육은, 그러니까 앞선 것은 AI 중심으로 학교를 거기에 맞게 특성화하는 거라면 AI 기본교육은 그야말로 AI와 무관해 보이는 그러한 학과생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융합시대에 AI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 소규모 대학과 사립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해서, 융합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은 필요하다 해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없으시면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 관련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1페이지 국립대병원 지원입니다.

41페이지 2개 내역사업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정책사업은 9월 이후 전공의 복귀에 따라 전문의 등 교수 인력의 당직이 감소하여 집행 예상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존 건강보험을 통한 당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12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시설확충 및 보수에 대해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병원 재정악화 및 시설확충 중장기 계획 수정 등의 사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이 관련 사업의 취소를 요청해 왔으므로 5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2건 모두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해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지역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증액한 4667억 3000만 원만 반영하고 초과분인 3768억 2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AI거점대학 사업은 과기부 사업과 중복되므로 3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세부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립대학육성사업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를 5국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서 핵심융합인재를 길러서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거점대학 사업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AI거점대학 사업은 거점 국립대가 대상이고요, 과기부의 AI중심대학 10개 사업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과기부의 사업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강승규 위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그러니까 지방의 국립대학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집중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죽어 가는 지방 국립대를 살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요.

우선 작년에 추경 등에서 4243억 원을 올해 반영해 놓고 다시 이거보다 2배 증액한 8700억을 지방 국립대 10개에다 넣는다, 예산을 2배 지원한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도 지방 국립대학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은 이런 지방 대학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취업이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대학에 예산 투입한다고, 그것도 예산을 2배 3배씩 늘린다고 가능하냐 의문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지방의 고등교육의 한 80%를 사립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 대학의 10개에다 예산을 집중 지원하다가 지금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 사립대 100개가 고사된다 저는 그렇게 우려됩니다. 저희 홍성·예산 지역에도 지방 국립대학이 하나 있고 사립대학이 2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융합된 어떤 교육 효과,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은 사립대학이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특성을, 이렇게 국립대에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지금 이렇게 국립대에 AI거점대학을 서너 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은, AI나 어떤 첨단과학기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 중심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에 또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또 지방 AI거점대학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중복 투자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국립대학 가운데 지역에 있는 학교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도 다 있지요. 그런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를 해 보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는 6200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거점국립대 평균은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노종면 위원** 2500만 원입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서울대가 3억 1300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2024년 1억 4000만 원, 반도 안 돼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 없이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립 지방대들은 다 무시하는 거냐? RISE 예산 등을 확충해서 그것도 같이 함께하자는 것이어서 교육 예

산을 전반적으로 지방의 대학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견 좀 통 크게 여
기서 그냥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교육위에서 우리가 이것 의논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의논했는데, AI거점대학으로 3개 대학을 9개로 늘리는 것을 대교협하고
의논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지금 3개 대학이 정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대교협에서는 9개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저희 정부안에는 일단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3
개로 담겨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부에서는 9개는 반대하고 우선 3개를 해 보고 나서 계
속 성과가 좋으면 추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서울대학교를 한 해에 8400억 들여서 10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는 발상도 아주 나쁘고요. 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카이스트를 10개 만들면 안 됩니까? 서울대학교만 대학입니까? 이게 지역을 완
전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보자면 국립대학이 많지만 거점국립대학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거점국립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시·도
들이 서울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야 서울에 살면 고려대학이든 연세대학이
든 다 서울시내에 통학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충청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이런 데
서는 거점도시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서 억지로 서울대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될뿐더러……

또 하나, 한 해에 몇천억 쏟는다고 되겠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이것 매년 들어가요.
경직성 예산이 될 텐데 이것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대학의 스타 교수들 같은 것, 정말 연구자 중심의 교수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
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도 시도도 좀 책임을 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 시도에서 거점국립대학
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거점국립대학을 졸업한 동창생들이 별로 그 대학에 대해서,
모교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매년 8000억씩 되는 돈을 무작정 부어야 됩니
까? 더구나 거점국립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도시에서 성장한 인구의 학령기 학생들만 혜
택을 볼 텐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나는 지방 시도의 매칭, 또 하나는 동창의 매칭. 미국 대학 보십시오. 미국 대학에서 왜
프린스턴이 1등 합니까? 프린스턴 학부 학생들이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자기 동창들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 시도에서 그 학교를 크게 키우겠다고 생각하
지 않는 학교를 어떻게 국가가 끝도 없이 돈을—한 번만 줄 것도 아니고—줄 수 있습니
까? 그래서 교육부도 지역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매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

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칸막이를 좀 열어 가지고, 예컨대 경상북도 가면 경상북도 내에서 경상북도의 대학을 키울 수 있는…… 지금 초중등 학생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칸막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북에 있는 또는 경남에 있는, 충북에 있는 이런 대학교 재정은 없어요.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다면적인 방식으로 해야지 올해 한 해 준다고 갑자기 이 대학들이 서울대학이 되겠습니까? 주려면 이 규모로 매년 20년, 30년 줘야 될 텐데 그런 경직성 예산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인 다차원 방면으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일부 AI거점대학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조화가 잘돼 있습니다. 다 성과와 맞물려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5페이지입니다. 6번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입니다.

글로벌대학 사업은 당초 30개교 선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27개교가 선정된바 미선정된 3개교에 대한 집행 예정인 사업비 1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글로벌대학 사업은 저희가 23년·24년·25년 10개·10개·7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 번째 해이다 보니 일정 기준에 도달한 대학이 7개여서 7개 대학을 선정을 했고요. 이 대학은 RISE 사업 전체 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것이어서 이 7개를 선정했다 해서 3개 대학에 지원할 사업이 감액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RISE에 속해 있는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병도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제가 처음에 30개, 원래 글로벌대학을 30개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과 전 대학에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10개, 10개 하고 나머지 3차 연도에 7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개 대학의 예산이 남지 않겠느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부의 프로세스하고 전체적인 그것을 받아서 보니까 RISE 사업으로 이렇게 병행이 되고 이래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삭감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87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교육부의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고객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학연금지 발간의 온라인화, 구독률 점검 등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지출구조 검토 후에 증액해야 하므로 전년도 계획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가교육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최수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참여지원과장 김보경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장 김보경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감액 심사할 내용이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의 감액 심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5페이지 국방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1건, 감·증액사업 1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군사시설 개선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예정된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해 1105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6페이지 2번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25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7페이지 3번 PKO 파병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군 동명부대가 소속된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의 임무가 2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예산 14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8페이지 4번 의무장비 획득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에 대해 환자후송버스의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2년 차 사업으로 집행이 필요하므로 1차 연도 계약금 10%만 반영하고 26년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9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9페이지 5번 과학화훈련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계약이 있으므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하기 위해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6번 환경보전 시설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계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하기 위해 3억 9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1페이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앞서 논의한 부처의 예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2페이지 8번 정비장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

능 예산 12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번 기동장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
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께서 8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임종득 위원님께서 8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8억 4000만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8억 4000만 원이요, 상임위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더 깎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방부는 예산을 완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
요? 전부 감액……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낙찰차액……

○김대식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한병도 8억 4000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3페이지 10번 특수장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
능 예산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번 정밀측정 장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이 5200만 원 감액을, 임종득 위원님이 5300만 원 감액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5300만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4페이지 12번 항공장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이 14억 1100만 원 감액을, 임종득 위원님이 23억 69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23.69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23억 6900만 원이요?

○조계원 위원 이렇게 해도 진짜 문제가 없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대부분 낙찰 차액하고 계약이 덜 된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5페이지 일반장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이 1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을, 임종득 위원님이 22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22.32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6페이지 14번 함정장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 4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7페이지 15번 화력장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이 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임종득 위원님이 19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19.73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노종면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이게 산정값이잖아요, 낙찰 차액.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김한규 위원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노종면 위원 시점의 문제인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시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10월 정도에 계약……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다년 차 사업인데 낙찰 차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왜 발생하는지, 더 뒤인데…… 입찰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2년도면, 25년·26년이면 작년에 이미 계약을 했었던 게 아닌가요? 구조가 뭔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 이갑수입니다.

25년 10월경에 계약이 됐는데, 25년하고 26년에 연부액을 깔고 계약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85%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그게 돈이 들어 오더라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 대신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삭감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임위의 판단하고 임종득 위원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지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게 상임위는 10월 28일 기준이었고 임종득 위원님이 한

것은 11월 13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연말까지도 일부 더 생길 것으로……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님이 청탁받아서 다시 내시는 거예요, 국방부 요청 받아서.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것 19억 7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8페이지 16번 통신전자장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26년 장기계속계약사업 중 26년도 연부액 초과금액 및 취소 사업에 따른 집행불능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이 2억 2900만 원 감액 의견을, 임종득 위원님이 3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3.5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0페이지 부서관 인건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둘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기본급 예산 650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도 국방부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겠는데. 너무 과다 계상도 많고 이것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그런 것 아니에요.

○김한규 위원 입찰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대식 위원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김한규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한병도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낙찰 그건데 버전도 틀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 이것은 과다 계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650억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요. 65억이라든지 6억 5000이라든지 이런 건 되는데 어떻게 650억 차이가 나지요, 차관님? 왜 그래요?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사실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에서 저희 국방부안으로 낸 안보다 추가로 더 반영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국방부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우리가 150억을 더 줬다고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국방부차관 이두희 비슷합니다.

○김대식 위원 비슷해요?

(웃음소리)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올려 줬다는 거네.

○조정훈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국방부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더 주고 지금 그 더 준 것을 깎는 거예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지요?

아니, 기재부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방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군의 큰 문제가 사병도 줄지만 부사관을 비롯한 초급간부가 주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6년 예산에 이대로 두면 군이 무너질 수 있겠다 그래서 초급간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원래 공무원들한테는 3.5% 인상이지만 훨씬 더 높게 인상을 하고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수당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런 정도 했으니 부사관 충원율이 25년 대비 26년에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사관 충원율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물론 이 설정한 게 25년 예산보다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낮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행률을 보니 정부가 예상한 충원율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정부가 예상했던 충원율은 한 87.7% 이런 정도 봤는데 국방부가 확인해 보니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지만 87%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한 85%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해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수요 계산을 했고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미 두 부처가 알고 있었고 부사관급 수당 및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정도 올리면 부사관급 충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기재부보다 국방부가 잘 알지 국방부보다 기재부가 앞서서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예상한 것에 이렇게 550억 정도나 되는 예산을 더 얹었다는 건…… 아니, 이건 대통령실의 요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기재부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통령실의 요구 이런 거랑은 기본적으로 무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관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하느냐에 따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조정훈 위원 아니, 국방부가 해 온 것보다 더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다른 부처 예산에서 이렇게 올려 줘 본 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 5월 말에 부처가 요구했던 예산안보다 높게 책정되는 예산이 왕왕 있습니다. 꼭 부처는 무조건 100을 요구하고……

○조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삭감을 해도 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잘못된 거지요. 과다 계상했고, 지금 동의하시는 것 보면 그 과다 계상을 인정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정부 예산에서 기재부가 약간의 과대 추계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은 650억 2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기본급 예산 554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4페이지 병영기본지원시설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15사단·22사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사업 1년 차 예산 연부율에 부합하게 설계비 5억 4800만 원을 제외한 예산 93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장병들이 스크린골프를 쳐요? 이게 우리 결산할 때도 골프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국방부 답변은 장병들 골프 안 친다고 그랬어요. 장병들이 골프는 안 치는데 스크린골프는 치나요? 그때 결산할 때도 스크린골프장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MZ세대들은 스크린골프 유행을 타서 필요한 건지……

감액에 동의하셨는데 이 질문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도드라져 보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부분은 영내 시설이기 때문에, 병사와 간부가 같이 쓰는 일종의 체육관 같은 역내 시설인데 이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나중이라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교들만 쓰고 그럴까 봐.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시설의 기본 취지는 영내, 그러니까 부대에 연병장 있고 식당 있고 체육관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지 대대급의 간부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MZ세대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 실제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설계비 나오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업만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부처에서 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 규모가 실제로 너무 큼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도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시고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93억 62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7페이지 간부 확보 장려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하여 과다 편성됐으므로 67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장기복무자는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위한 내일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273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상임위·예결위 의결안인 67.9억 원 삭감은 수용하고, 예결위에서 제시하신 273.71억 원은 저희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 정부안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첫 번째 67억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상임위?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정훈 위원 두 번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273억은 그대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정훈 위원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 볼 때……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 당의 분석에 의하면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장교 수급률이 떨어지다 보니 군에 와서 그야말로 은퇴까지 있지 않고 몇 년 근무하고 나와서 다시 사회생활하는 분들에게도 간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그야말로 부사관급들이냐, 아니면 대위·소령·중령 등에서 전역하는 분들에게 내일준비지원이 더 필요하냐라는 정책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간부에 대한 내일준비금 또는 퇴역 후 준비금은 초급장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급이 되지 않은 소령·중령 등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동의해 드릴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소령·중령 등 진급 탈락자들이 아니라 들어와서 몇 년 안 된 5년 미만의 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거라 과연 이게 적절한 타기팅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지금 저희 군이 당면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일단 젊은 사람들이 신규로 장교든 부사관이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유입하기 위한 대책이 있고, 두 번째는 군생활을 장기로 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가 있어도 탱크를 세워 놔야 되고 K-9 자주포도 세워 놔야 되는 작금의 현실인데, 그러려면 단기복무라도 들어오게끔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장기로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또 장기를 한 사람이 머무르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은 후자에 해당되는, 장기로 유인하기 위한 것과 장기로 된 사람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고. 대상자는 장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 다 해당되는 것이고 사관학교 출신자만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상 중의 85%는 일반 출신이고 15% 정도는 각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러면 사관학교는 당연히 장기로 하려고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공부시켰는데 왜 또 주느냐? 그런데 사관학교 출신자들도 5년 차 전역이 최근에 급증을 해서 중간 허리 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에 저희가 내놓은 솔루션 중의 하나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매월 납입액의 100%를 매칭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납입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30만 원인데.

○조정훈 위원 한 달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정훈 위원 기간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3년에 개인당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의 국고가 보조됩니다.

○조정훈 위원 3년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정훈 위원 제가 이것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할 텐데, 제가 국방부에 요구하는 건 이 정책을 쓰면 초급장교의 유지율 또는 이탈률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다 들이면 정책적으로 몇 %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군이 처한 작금의 현실이 한 가지에 의한 문제면 외과적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문제는 계엄으로부터 해서 사회의 변화, 국민 인식의 변화, 젊은 MZ세대들의 인식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어서 하나로 뭉개 해결할 수가 없는, 집으로 따지면 서까래도 썩고 대들보도 썩고 기둥도 썩고 주춧돌도 흔들리고 비도 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정훈 위원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탱크가 서 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서.

그래도 차관님, 이것 정책목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부 확보 장려를 했으면, 이 돈이 합해서 지금 수백수천억인데 이만큼을 예산으로 쓰면 간부 확보가 얼마큼 될 거다 또는 중간에 탈락하고 전역률이 몇 % 줄어들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최선을 다해 보고 나중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거든요, 차관님. 그런 지표가 없으십니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조계원 위원 저도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게 명칭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이라고 하면 청년간부들이 사회에 나가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적금으로 들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의 취지가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하사관 간부들도, 단기복무 하사관들도 장기복무로 더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장기복무 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해서 복무 기간 중에 장기복무 선발 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정책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처음부터 장기간부도약적금으로 이 사업을 제시했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수용으로 가지요, 보류가 아니라.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가 명칭부터 좀 잘못 붙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부도약적금으로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명칭도 그렇게 바꾸셔야 되고 바꾸면 사업 내용도 조금 바뀌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초급간부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들어온 초급간부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두 번째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차이를 줘야 돼요. 처음에 들어와서 3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고 3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면 다른 또 메리트가 있는 적금계좌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적금을 불입을 했는데 3년을 채우지 않고 근무 안 하고 나가 버리면 국가에서 주는 부분을 주지 않는다는든지 이런 식으로 페널티 있게 좀 달리 구성을 해야지 양쪽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고 제대를 해 버리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여튼 그렇게 이 사업 내용을 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에 논의할 때 그런 보완사항까지 같이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국방부차관 이두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급간부를 타기팅으로 한 것은 임관 시에 1200만 원을 일시불로 줍니다, 단기복무.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머무르고 장기로 하도록 하는 대책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머무르도록 하는 게 이거라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3년 복무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닙니다. 장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가 된 사람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형수 위원 장기 지원한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장기가 된 사람한테.

○소위원장 한병도 이 건은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보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 이거는 보류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8페이지입니다.

21번 간부양성교육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학군후보생 부교재비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지원인원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6억 6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6억 67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2번 국방행사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인도태평양 군 최고위급 회의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26년 회의 개최국을 캐나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행사예산 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1페이지 23번 통신시설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계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조정하기 위해 2억 6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군인복지기금 수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국방부 마지막 심사 대상입니다.

이 세입과목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7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인쇄가 안 됐습니다만 122페이지에 관련한 증액사업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24번에 복지기금 전출금이라는 세부사업명의 67억 7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동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이므로 국방부

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방부 의견 들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내용은 국방부 일반회계 증액을 전제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증액 심사할 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은 증액 심사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병무청장 홍소영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기획조정관 문경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64페이지 병무청입니다.

병무청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현역병모집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군 임무 수행과는 관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 소요 및 지원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집병 선발을 위한 면접을 축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 1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병무청 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예.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나오신 분 누가 나오셨나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청장님이세요?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회의?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소위원장 한병도 자료, 공개적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전달받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소위원장 한병도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 이용철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미루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67페이지 방위사업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기타 경상이전 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5개년의 FRB 예치금 증가율 및 평균 세입실적을 반영하여 예상치를 추정하면 적정 세입규모가 5401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되므로 12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증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8페이지 기타 재산 이자 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출연금 예치이자 및 기타 이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10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증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4건, 감·중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공사 지연으로 26년에 편성된 공사비 일부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진척도 및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사비 4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0페이지 2번 특임여단 전력보강-Ⅱ입니다.

내역사업인 특수작전용 대물타격 무인항공기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계약체결 일정을 감안하여 20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번 중거리 자폭드론입니다.

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추진 지연으로 25년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해서 103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번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26년 계획된 기본설계 및 부지매입 착수가 어려우므로 68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39억 8400만 원 감액, 건설보상비 28억 98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번 제독차-II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독장치 핵심부품 단종 및 진부화, 수입부품 수급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착수가 제한되므로 22억 1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질문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의 경우 개조하려고 했는데 핵심부품이 단종되고 해서 부품을 수급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게 돼서 감액하는 거라면 성능개량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향후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 후에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2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능개량은 27년 이후에나 가능하냐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제 취임한 관계로 좀 자세한……

○소위원장 한병도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답변해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능개량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핵심부품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성능개량 여부가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소요 검토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개량이 안 되면 이 차량은, 이 장비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네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전체 장비 자체를 구매 형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핵심 장비, 그러니까 부품이 국내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현대로템이라고 돼 있는데?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이 부품은 수입품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입품인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예.

○임미애 위원 이게 혹시 국제적인 분쟁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일은 아닌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아니고 그 업체가 이 부품을 단종을 시켰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무기를 사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기를 거래한 해당 국가에서 부품을 단종해 버리면 저희가 성능을 개량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고 가지고 왔던 물건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2페이지 6번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R&D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사업 공사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한기호 위원님은 14억 4300만 원 감액의견을, 예결위는 66억 37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예결위안 66.37억 원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한 가지 제가 매우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청장님,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나 이런 데 이렇게 우리 경찰기가 떠서 북한 주변국들 쉽게 말해 감청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또 돈 들어서 개량한다는 얘기까지……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저희가 단순한 사업명이나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ROC라든가 주요 성능 이런 것은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 정도는 비밀이 아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예,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쪽의 그런 것을 정보 수집하고 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예.

○김기웅 위원 비밀 아니에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그런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래도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 그런데 원래 정찰이라는 게 정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정찰하고 또 다르니까.

○**김한규 위원** 군 정찰기인데.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하기는 합니까, 지연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이 사업 자체는 지연이 없고 지금 지연이 되는 부분은 시설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강승규 위원**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지요, 지금?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예.

○**소위원장 한병도** 이 건은 66억 37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3페이지 7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II R&D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험평가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조사활동비 등 총 12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4페이지 8번 고속전투주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공사 계약 일정 및 실제 공정 수준을 고려하여 26년도 공사비 예산 11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번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R&D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도 예산안에 27년도 납품 예정인 품목에 대한 비용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수금 7억 7800만 원을 제외한 예산 10억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5페이지 10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R&D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항공시험장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인허가 지연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 25년 예산액 중 상당 부분이 26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무인항공기 시험장 구축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사업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반영된 문제점이 있고 설치 예정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반대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17억 7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연구인프라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항공시험장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건설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선행 조치, 최종 토론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철회하시나요?

○조계원 위원 예.

○강승규 위원 철회한대요. 감액에 철회를 한대요, 두 번째 것.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상임위 10억 감액만 감액되고……

○소위원장 한병도 위는 감액하고, 밑에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밑에는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6페이지 11번 시험평가 기반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됐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FMS 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6년 예산에는 초입금 5억 원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4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번 한국형구축함(KDDX)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36년까지 총 7조 467억 원을 투자해서 대북 위협 및 주변국 해양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능력이 우수한 한국형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일정 지연을 감안할 때 사업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 전체 삭감 또는 일부 삭감이 필요하므로 309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일부예요, 전체예요?」 하는 위원 있음)

309억 6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8페이지 전투예비탄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최근 5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26년에 계약하는 장기계약 착수금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며 27년도부터 도입하기로 계획된 소화기용 고성능탄약이 현재 사용 중인 탄약을 대체할 것을 고려하여 비축 목적의 탄약 구매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450억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디 나와 있어요, 450억?

감액 규모가 450억인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안건에는 감액 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는 450억 감액을 건의드리는데 바고, 그 내역은 지금 여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계약 착수금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소총용 고성능 탄약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388억, 작년 수준의 40% 정도만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총용 고성능 탄약에 대한 납품대금 6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450억 감액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45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79페이지입니다.

방위사업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구매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으로 재입찰 공고 및 구매시험평가 재수행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자산취득비 767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246억

200만 원 감액 의견과 1240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26년 구매시험 평가 재수행 후 12월경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총사업비의 10% 수준인 485억 6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게 지금 제안서 평가 등을 받아서, 3개 업체 제안을 받아서 성능평가 등을 해 봤더니 사실상 기준에 다 미달된다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응모한 3개 업체가 다 미달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고도화하고자 하는 GOP의 여러 가지 경계 고도화 사업에 어떤 시설이…… 지금 국방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에 적정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는 건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일단 시험평가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중단된 이후에 결함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3개 업체 모두에게 확인을 하니까 결함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

○강승규 위원 그런데 결함의 정도가 경미해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아주 경미하지는 않은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강승규 위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GOP를 완전 무인화해서…… 그러니까 감측 장비를, 카메라나 뭐를 다 무인화시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담당 부장입니다.

감시장비, 감지장비, 통제장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감시장비는 중장거리 카메라, 감지장비는 철책선에 있는 센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통제하는 통제장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평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것은 감지장비, 감시장비인데 단거리·중거리 카메라와 감지장비는 내년에 다시 시험평가를 재개하게 되면 재공고해서 한 3월, 4월 이 경에 다시 착수할 건데, 업체들이 그때까지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평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렇게 되면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우선 철원 지역의 22사단에 경미한 성능개량이라는 사업은 선행해서 조치했는데, 안개가 끼었을 때 식별하는 탐지율이라든지 인공 지능을 활용해서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들도 다 시한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된 일정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1개 사단에 대해서 계약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내는 일정인가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총사업비가 4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만약에 계약하면 26년, 27년, 28년에 사업이 종결되는데 보통 저희가 3개년 사업에는 최소한 초년도에 총사업비의 10%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물론 더 적은 예산으로라도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27년, 28년에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상임위에서 감액된 767억 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46억 내지 1240억이 감액돼도 계약금 10%는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계약금의 1%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4800억 원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4800억 되는 것을 지금 실제 성능평가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시작한다는 게…… 이 성능이, GOP의 고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방부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업체에서 달성해 줄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까 경미한 수준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이렇게 10%씩이나 반영해놔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해서 4800억의 사업을 무조건 내년에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송기현 위원** 안 맞지요. 안 맞지, 당연히. 전체적인 사업은 4800억이라는 것뿐이지 26년도에 할 것은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기존의 방사청의 어떤 업무 관행 때문에 총사업비의 10%를 책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체계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협력업체한테도 예산들을, 자원들을 배분해 줘야 하고……

○**송기현 위원** 어쨌든 내년에 하나밖에 계약이 안 된다는 거고 내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돈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총사업비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업무 관행이.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분야 같으면 총사업비가 4800억이라 하더라도 올해 연도, 내년도에 계약 가능한 것을 정확히 산출을 어느 정도 해서 가지고 거기에 대비된 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소영 간사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40억 정도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한규 위원** 자료 보고 나중에 보류해서 조금 더 꺾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상임위 금액보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럴까요?

○**이소영 위원** 지금 방금 말씀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듣고 보류를 하도록……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시지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저희가 총사업비의 1%만 예산 남기셔도 계약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착수금이 나가야 준

비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데……

○송기현 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됐는데 무슨 착수금이 나가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내년 말에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공고 준비 중입니다.

○박형수 위원 계약금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걸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방사청 끝났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용하면 그냥 삭감해 버리고 가지요. 계약금 남겨 두고 나머지 삭감하는 데 동의하면 그냥 삭감해 버리고……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자면 내년에 계약할 수 있는 게 일단 하나이고 그것에 대한 계약금은 48억 원이고 그것 제외하고는 내년도 안에 계약 체결이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저희가 이것은 계약은 1건으로, 구매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업체 계약 상대방하고 1건의 구매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별로 따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4800억 가지고 1개 업체와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는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이 얼마냐고요.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계약금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통상 3개년 사업이면 10% 이상을 저희가 초년도에 주는데……

○박형수 위원 10%?

○강승규 위원 아니, 아까 1%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1%.

○방위사업청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예, 그것은 계약 협상하면서 1%만 착수금으로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류해야 되겠다. 보류하고 다시 따져 봅시다. 1%라 했다 10%라 했다 이러니 정할 수가 있나.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도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방위사업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청장님, 어제 취임하셨나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소위원장 한병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사업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입니다.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기초실장 김기남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95페이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3개년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20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일반회계 세입 증액에 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5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지특회계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 사업의 회계를 변경하고 기존의 지특회계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과 통합하기 위해 117억 9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226페이지의 지특회계에 동명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에서 117억 92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므로 성평등가족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의 회계 일원화를 위한 감액 의견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증감 연계사업으로서 상기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97페이지 2번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최근 2년간 지원 실적은 돌봄인력 수급 부족 및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 영향으로 예산편성 기준 가구 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계획 가구를 2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9억 3600만 원 감액 의견을, 예결위에서는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같은 내내역사업 예산 중, 두 번째 줄입니다. 26년부터 신규로 반영된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예산의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5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을, 예결위에서 11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19억 3600만 원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 상임위안대로 5억 9000만 원 감액 조정되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앞부분 말고 뒤에 지금 인구소멸지역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가 보편복지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 돌보는 게 어려운 것은 인구소멸지역이나 서울에 계신 부부 출근하는 집이나 더 바쁘고 더 힘들고…… 이 쪽이 애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도권 지역 아동들이 차별받는 거지요, 실제로. 역차별을 받는 거지. 아니, 아동복지라는 개념을 인구소멸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쓴다는 건데 이것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내놓으면 모르지만 이 부처에서, 아동복지를 해야 될 부처에서 지역인구소멸 문제 정책 수단으로 내놓는다는 건 좀 안 맞는다. 실제로 지역별 차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듣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김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내에서 많이 논의 했는데요. 이게 보편적 복지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이돌봄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측면에서 더 들기 때문에 저희 성평등위에서는 야당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신 건데요. 서울에서도 아이 키우는 게 어려운 건 맞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다른 영유아 관련된 복지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도 적고, 그러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보다는 실제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여기를 더 주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안은 10%였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이 한 살 더 늘어나면서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 더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통일성 측면에서도 10%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인구감소지역에 10%까지 꼭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냐 한 5% 정도 더 든다고 고려해서 합의 처리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복지위에서는 표결 처리했는데 성평등가족위는 합의 처리한 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한 거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견 반영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복지위는 보류하지 않았어요?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합의 처리가 아닌데, 한쪽은 방식이 합의 처리냐 아니냐에 따라 갖고 동일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는 보류하고 하나는 처리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어제도 위원님이 합의 처리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박형수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김한규 위원 회의록 찾아보시면 국민의힘 위원이 합의 처리한 거냐라고 물어보셔 갖고 제가 지금 기억했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보류했다가 합의 처리한 데를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나중에 저희 의견……

○박형수 위원 보류했다가 충분히 합의 처리된 걸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위원장님, 이게 197페이지 부분이 있고 198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197페이지 부분은 다 동의된 것 아닌가요?

○김기웅 위원 수용했잖아요, 감액 수용.

○소위원장 한병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관련 19억 3600만원 이것은 감액을 수용하고……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것은 상임위대로 감액하고.

○소위원장 한병도 뒤에 감소지역, 소멸지역 관련된 이 내용 5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고까지 했는데……

○임미애 위원 저희 이것 합의 처리된 거예요.

○박형수 위원 보류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 주시지.

○박형수 위원 저쪽 부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결론은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보류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평등가족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돌봄 예산을 가구를 발굴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처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이 돌보미 예산이 부족하다고, 조금 더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고 얼마나 발 동동 구르는데 이것을 가구를 줄여서 조정하면서 감액을 한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저는 부처가 이것을 올려 달라고 읍소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영아종일제 가구 수를 줄이고 영아시간제는 늘려서 전체 혜택 가구 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은 24년 행사성,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불과하여 폐지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없고 불요불급한 활동비에 불과하므로 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은 24년 행사성,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불과하여 폐지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없고 불요불급한 활동비에 불과하므로 4억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의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 청소년의 활동 진흥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관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들이 지방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감액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일이 있어서 이견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인가요, 아니면 보류……

○강승규 위원 감액을 할지 원안 유지를 할지, 지금 원안 유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간사 협의해서 추가로 박형수 간사님한테 나중에 따져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일단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의견이었는데 보류로 하겠다?

○강승규 위원 예, 보류로.

○김한규 위원 그래도 저는 보류 안 하고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예.

잼버리 사태 이후에 성평등가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청년 활동 예산들을 대폭 정부안에서 그냥 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아예 증액 논의를 작년엔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빠졌는데요. 그때 잼버리 관련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되게 위축돼 있었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부적절한 것처럼 보여져서 정부가 알아서 빼서 오고 또 청소년들이 약간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들을 해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다 뺐보여서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엔 아예 예산이 없었는데

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한 12.5억인데 거기의 한 60% 수준만 일단 복원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그룹활동. 그리고 이게 무슨 특정 정당에 유리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청소년동아리에 직접 보조하는 예산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뒷부분 청소년참여위원회까지도 같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설명을 같이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엔 예산이 아예 정부안에서 빠져서 논의를 못 했는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있었던 거고 이것은 법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의무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존속시키는 한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강승규 위원 또 뒤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그룹활동 지원은 보류를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김기웅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에요?

○강승규 위원 예, 그것도 보류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것도 보류예요?

○강승규 위원 예.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지금 이 기본사업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는데 부산 사하에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것 완공된 것 있지요? 청소년에 관계된 것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수련관 말씀하시는……

○김대식 위원 수련관 있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김대식 위원 그것 요즘 가서 한번 보니까 전혀, 건물만 수백억 들여서 지어 놓고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수련관은 아마 생태 쪽으로 주제를 정해서 한 수련관이 고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생태를 주제로 했는데, 아니면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것을 생태로 하든 무슨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뭔가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한번 챙겨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 부분 이용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폐허가 되지. 그것 한번 좀 잘 챙겨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지금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청년기본법이지요, 청년기본법?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청년기본법은 국조실에서 운영하는 법이 청년기본법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청년기본법도 지금 하시는 이 사업과 무관합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청년기본법의 청년하고 연령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연령대는 다른데 여기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 이 법은 관련 되지 않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거기 장관님도 여기 위원이잖아요. 여기 청년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총리실 위원회의 위원이시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청년기본법이라고 얘기했나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요, 청소년 기본법.

○김기웅 위원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있잖아요. 청년기본법인데, 혹시 청년기본법 내용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는데 내 얘기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

다.

○**김기웅 위원** 청년기본법에 보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업들이 청년기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꽤 있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 이렇게 해서…… 청년기본법 작년에 시행된 건 아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김기웅 위원** 이 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 나는 나대로 간다 그러지만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 지금 자세한 사항을 구비해 놓고, 여기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업은 연령대를 9~24 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에는 더 확장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 일부 연령 쪽으로는 중복이 되지만 그 부분이 사업적으로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요, 사업 중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법에서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심의해야 되고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 등 많은 규정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에 이 사항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소위 이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나 총리실에 보고하거나 심의해야 될 내용, 절차를 거쳤느냐 여쭙보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이나 또 그룹활동 사업이나 이런 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기웅 위원** 아는데, 제 말씀은 이 법이 작년에 발효됐잖아요, 10월에.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걸 위한 모든 걸 막 갖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도 있고 연도별 시행……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많은 규정이 있고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고 규정이 다 있어요.

내 얘기는 이 법도 지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 부처면 당연히. 여기 내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지키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나는 이 법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법에 있는 내용들 중의 많은 부분이 지금 관련이 돼요. 연관이 있고, 서로 협조를 하거나 중복 부분을 배제하거나 뭐 맞춰 나가야 될 사항이지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총리실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방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리실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는, ‘내 법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데.

○**조계원 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앞선 사업들과 지적사항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칸에 내내역사업인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행사성,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불과하여 폐지된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없고 불요불급한 활동비에 불과하므로 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9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제가 이것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의 예산하고 같이 청소년 행사 사업이 한 3개 정도가, 행사성 또는 불요불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24년에 폐지됐던 3개 사업이 부활이 됐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이 부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간사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일단 법적 근거가 있고요.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도록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잼버리 때문에 국제교류 자체가 이슈화돼서 작년에 한 번 빠졌을 뿐이지 2023년도부터 그 전까지 계속 평균 13개국 9개국 매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던 사업이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과거에 지적을 받아서 취약계층들한테 글로벌 역량강화를 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에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글로벌 역량강화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보류하시더라도 여야 간사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이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송기현 위원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하고 청소년 문제를 같이하고 있어요. 저도 20대 국회 때 그 당시 여가위에서 몇 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평등가족부, 당시 여성가족부의 업무하는 내용을 보면 여성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고 청소년 부분에 약간 포션이 좀 작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그 업무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과 좀 약간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더욱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의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에서도 청소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여성 쪽에 많이 업무가 들어
가 있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왜
또 그러나 하면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활
동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사업비도 그렇
고. 부처가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안 기울이다 보니까 또 활동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차관님, 거기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중에서 해외 사업 같은 것, 글로벌 사업 같은 것은 특히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렵
게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 잘해 주시고 위
원님께서도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그냥 짧게……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임미애 위원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업 대상
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사업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도 전담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평등가족
부에서, 교육부보다는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에서 하는 게 아닌 것을 주로 하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니까. 우리도 지역구에 그런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좀 여러 개 있
는데.

○소위원장 한병도 이후에 재논의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
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0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무총리 소
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중복되고 보조사업을 통한 행사성 사업에 불과하므로 전액 감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감액에 대
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김기웅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똑같이 중복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이것은 총리실 거랑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희도 그래서 성평등가족위에서 총리실 업무랑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총리실이 사실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폭넓게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일자리 이 정도에 집중하는 정책 총괄 조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청년에 관련된 개별 정책은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청년세대 간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확인도 못 했다 이제까지,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일단 실태를 확인하고 당사자들한테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의견 수렴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처 자체가 새롭게 출범했으니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

○**이재관 위원** 지금 총리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어떤 중복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차별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총리실에 소속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책 집행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격차 인식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거는 주거대로 국토부에서 집행하고 또 일자리·복지는 관련 부처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재관 위원** 콘텐츠의 차별화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쟁거 보시고 사업의 유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앞서서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부활한 청년 각종 위원회라든지 사업 그다음에 이것도 성별균형 문화확산이라서 상당 부분 행사성 지원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류를 제청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당 예산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 법률안 처리가 불확실하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고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사업의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이소영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법률 개정 전제로 편성된 예산도 수시배정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논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입에 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안은 3개년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국고보조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10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증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건 남았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여성정책 전략기반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24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우리 기관은 부문·프로그램 명칭 및 사업명 변경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당연히 사업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요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과방위인데 과방위를 먼저 하고 뒤에 기획재정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구혁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차관 류제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5권입니다.

5권에 16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중액 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공공행정 서비스 혁신기술 개발(R&D)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 과제 중 대통령경호처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과제에 배정된 예산 1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D·정보화)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범부처 R&D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 범부처 R&D 통합플랫폼 구축 ISMP사업과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고도화사업은 각각 나누어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2개 사업 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25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이게 올해부터 계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사업 내용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허용해 주신다면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박민규 위원 제가 이것 25억 감액 의견 냈는데요. 그런데 관련돼서 몇 가지 것들 좀 보완했다고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데 관련해서 설명 들을 수 있어요? 기록을 남겨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과정에서의 통합 발주라든지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한 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본 사업은 제가 예결위 정책질의 때 지적했던 사안이고요. 과기부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한 보완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여 철회를 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전제로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하겠다는 것을 남겨 주는 조건으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약속 사항들을 제시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결로 하고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4페이지 3번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기관운영비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한 재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현실성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55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인원 모집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유사 중복 사업이 존재하며 의무복무 담보 수단이 부재하므로 4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두 가지 모두 감액에 대해 별도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으로 구축하려는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는 기획비 10억 원만 반영하기 위해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이 부분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1페이지 5번 AI혁신펀드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하고 국민성장펀드의 10%만 AI에 투자하더라도 AI혁신펀드의 주목적 최소투자액 7800억 원의 19.2배에 달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5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AI혁신펀드 사업 감액에 대해서 정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첨단산업 분야 중심 또 AI 분야에서도 GPU의 확산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 쪽에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들에 필요한 그런 투자자금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규모여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1000억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재부와 협의하실 때 금융위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아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저는 답변이 굉장히 모호하기만 해요, 솔직한 말로. AI에 투자하는 것 다 알겠고, 저희 당에서 AI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AI 단어만 해 봤는데 지금 수십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 AI 응용제품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무부처인데 지금 본 펀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됐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성장펀드 150조는 대형이고 그리고 과기부에서 하는 AI혁신펀드는 대형이 아닌 중소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펀드를 운용하시는 법은 없어요. 펀드 운용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펀드 운용은 이 산업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펀드의 수익률 목표 있어요? 수익률 목표도 없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수익률 목표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초기 AI 벤처·창업기업 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훈 위원 그래도 펀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모험투자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손실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손실까지는 아니어도 정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들보다는 훨씬 모험적이고 그런 인내 펀드로 저희가 지금 초기 창업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펀드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펀드는 성격상 크게 성공하는 펀드도 있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국민성장펀드는 대형 사업이고 이 AI혁신펀드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고 국민성장펀드는 본전과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이고 이 AI혁신펀드는 고위험 투자라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기재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세부적으로 더 운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방금 과기부차관이 설명한 대로 그런 틀에 따라서 운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AI, 국제적인 비교에서 각종 지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AI 초기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게……

○조정훈 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든 부처, 농림부를 포함해서 다 AI하고 관련된 예산이 수백수천억 원씩, 펀드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지 않는, 거기서는 절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서도 투자할 수 없는 이 AI혁신펀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조정훈 위원** 얘기해 주면 제가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 다 알려 드릴게요.

너무 많이 중복, 중첩이에요. 지금 금액 자체의 문제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분절적으로 요이 땅 해서 하시면요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차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2차관님, 이런 실례했습니다.

지금 펀드가 수십 개가 운용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수십 개의 펀드를 운용하게 돼요, AI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AI에 특화된 펀드는 일단 집중적으로는 AI혁신펀드 이것 하나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AI 펀드는 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나머지 AI 펀드는 저희가 다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일종의 덤테크 범위에 일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조정훈 위원** 다른 분야는, 다른 부처에서 만드는 스마트 AI혁신펀드는 AI 기술에 투자 안 해요? 당연히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중복성 문제는 저희가 부처 간에 사업자 선정할 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도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 투자는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칠게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AI 관련된 투자 가능성이 있는 펀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AI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에 편성된 이거 하나고요.

○**조정훈 위원** 이름은 혁신펀드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덤테크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범주가 약간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 AI에 집중된 특화 펀드는 정부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거 보류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 다 끝나고 진짜 AI와 관련된 펀드와 투자금액을 총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모는 어떻게 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처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이렇게 수십 개 부처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금액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절적으로 운용하다 보면 시장 왜곡이 오고 시장은 이런 분절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투자되지 않아야 될 투자에 돈이 들어가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거고 부처를 운영하는 건데 너무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것처럼 AI 응용이었나요, 무슨 응용제품 10개 부처 하는 것 일괄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처럼 AI와 관련된 펀드도 일괄 보류해서 다 같이 통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기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다 보기 전에는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과기부가 AI 기술의 주무부처고 여기서 하는 AI혁신펀드는 계속 강조한

대로 스타트업, 그러니까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정책인 것이고요. 다만 주무부처가 기술심사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부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펀드들도 중요하겠습시다만 과기부의 AI혁신펀드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기본이 되는 펀드가 아닌가. 우리가 정책 수단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펀드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갖는다는 것을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설정한 대로 소규모 자본이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투자처를 발굴한다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저부터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AI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그냥 기계적으로 AI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한다?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보도 양의 상당수가 또 보류, 또 보류, 또 보류, 언론이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국민의 어떤 우려로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AI 관련된 각 부처의 사업들 있잖아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것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을 AI 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AI 붙여 가지고 기존 사업을 갈아 끼우는 것 아니냐? 이것을 그냥 반영한 게 아니고요. KISTEP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관한 도움을 받아서 AI 위상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일단 발라냈고요. 그리고 부처 간에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들도 발라낸 결과물이 현재 지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AI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일을 실제로 해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중복해서 낭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 보류……

○박형수 위원 보류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어디에 쓰여질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차관님은 지금 국민성장펀드와 이 혁신펀드가 중복되지 않는 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의 주 투자 대상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수소 등등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AI입니다.

그런데 그 150조 원 중에서 AI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여기 혁신펀드에

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게 투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혁신펀드는 국민성장펀드보다도 낮은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모험 거래에 투자를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 자체도 6500억 원인가요, 1년에 100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6500억 원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이 6500억 원을 같이하는 거지요. 민간 6500억 원,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이 펀드에? 그러면 이 펀드는 차관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수익성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모험 거래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민간이 여기 펀드에 투자를 하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AI혁신펀드는 내년도에 1000억을 요청드립니다만 올해만 해서 본예산에 450억, 1차 추경 때 550억 그리고 2차 추경 때 500억 해서 지금 1500억의 혁신펀드가 정부 재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1500억의 혁신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운용사 선정을 마쳤는데요 이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운용사 선정하는 데도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AI 분야는 리스크도 크지만 굉장히 큰 리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투자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춰서 저희 국내에서는 너무 투자자금 규모가 적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저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AI에 투자를 하는데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본펀드를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차관이 아까 국민성장펀드와 이 혁신펀드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수익률을 평균하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높아야 돼요. 그런데 다만 개별 사업에서는 낮은 모험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아주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수익률이 높다고 해야지 펀드가 조성이 되지 국민성장펀드보다 이 펀드는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여기 투자하겠어요, 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를 하지. 그래서 그 말씀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해석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차관님. 됐습니다.

○이재관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마디만.....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까지만 듣고 이제 이것은 그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어제부터 부처를 하면서 AI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 중복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국민성장펀드는 특정 부처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보고 펀드의 타깃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과기부는 기초과학에 그 기반을 두고 또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술과 관련된 부분 또 농업의 어떤

펀드는 농업 기술에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 부처에서 관장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부처의 특정화돼 있는 기술에 집중화되는, 그리고 그것 외 지역에 대한 기술들이 오히려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각 부처에 이 AI혁신펀드를 분산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취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금융위에서 각 첨단산업 전략 분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메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글썽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 분야에 있는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사업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지금 현재 저는 이 전략을, 전술을,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각 부처에 있다고 해서 중복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위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산업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산업 분야들을 두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성 문제는 저희가 아주 층층이 집행단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검토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오늘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6번 공공AX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기부 내에서 공공기관 AI 전환 지원사업, 공공AI클라우드 개발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공 분야 AI 적용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국민과 밀접한 부처에서도 AI기반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바,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므로 관련 예산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공공AX프로젝트 이 1000억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AI 관련된 예산이 올해 정부 전체적으로 10.1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0.1조 원의 예산 중에 GPU·데이터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한 5.4조 원 정도가 들어 있고 크게 각 분야의 AI 대전환, AX라고 하는 그 과제에 2.6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할 과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공AX 1000억 사업은 AI를 각 분야에 접목하는 AX사업 중 일환으로 2.6조 원 중에 1000억이 과기정통부에 블록펀딩 형태로 편성이 되어서 각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과제를 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논의하실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논의하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이 10개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AI 대전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처가 소관하는 사업 분야에서 당장 AI를 통해서 신속히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8920억 원이 편성됐고 저희 과기정통부에 6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각 분야의 AI를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에 편성된 이 예산 1000억 원은 과기정통부가 지금 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한 모델하는 것, 그다음에 GPU 국가 데이터·컴퓨팅센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활용한 공공서비스 AI 전환을 위해서 저희한테 100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 내부나 관련 부처 간의 사업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속 중복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봐야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큰 차원에서 AI 대전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냐하면 정부 전체가 10.1조 원인데 예산에서 인프라 구축이 5조 4000억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에 AX 이 부분이 2.6조 원 중에서 1000억이 과기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1000억이 과기부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각 부처별 기관들의 공공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이고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국토부나 교육부나 기후에너지부나 이 전체로 하니까, 사실 메인은 과기정통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흩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2.6조 원 중에서 1000억이 과기부에 포함되고 나머지 2.6조 원 중에서 다른 부처가 다 갈라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각 부처에 다음 과제 7번……

○김대식 위원 이게 2.6조 원 중에서 과기부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AI 플랫폼 부처로서 AI 컴퓨팅센터, 지금 많이 구매하는 GPU 예산도 2.1조 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10.1조 원 중에 5.1조 원은 과기정통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5.1조 원 정도의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과기부가 메인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메인으로 돼 있고 각 분야에 AI를 접목해야 하는 사업들은 과기정통부 일부 그리고 각 해당 부처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차관님,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다 보니까 도리어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십 점 몇조 중에서 기본적으로 5.4조가 인프라라고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GPU AI 센터 만들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공공AX프로젝트에 대한 1000억 감액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큰 얘기를, 물론 설명은 잘했지만.

제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AI 사업 중에 몇몇 사업들은 다른 부처…… 우리가 병합으로 다른 부처에 AI로 이름되어 있는 AI 위성은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상관없고, 이거는 AI 위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AI 전환을 위해서 기본적인 핵심 인프라와 모델링과 매뉴얼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기초설계도를 만들거나 기초 땅 파기 작업에 대한 AX에 1000억이 필요한 거지요. 거기에 갑자기 막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감액할 것은 감액할지라도 이 부분은 기초 땅 파기를 하지 않고서는 도리어 AI에 관련된 예산의 효용성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제가 그쪽 상임위에 있어서 원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차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국가전략은 크게 세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팅 인프라, 그래서 우리가 GPU 5만 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마땅히 했지요. 그다음에 젠슨 황이 와 가지고 삼성·SK 이런 데 5만 장씩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6만 장. 그런데 5만 장씩 기업에 팔린 것들은 다 수요가 있습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U라는 게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년, 5년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건데 3년, 5년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없는 돈에 구입한 GPU도 아마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철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컴퓨팅 인프라는 어쨌든 국비 예산을 투입해서 5만 장 또 젠슨 황이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과 해서 주기로 한 21만 장 해서 26만 장 해서 갑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데이터지요, 데이터.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GPU를 돌릴 만한 데이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련할 것이냐 이것을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보면—과방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전부 쪼가리 쪼가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GPU 5만 장을 도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요를 매칭시키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전략적 수요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K-클라우드 같은, 예컨대 의료, 교육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언론, 우리 언론도 지금 엄청난 멀티모달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정말 좋은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서 과기부 주축으

로 하는 이 GPU랑 매칭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하나는 인재인데 인재는 당연히 하게 해야겠지요.

저는 보니까 지금 과기부가 다른 부처랑 함께 1000억을 받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GPU 5만 장의 수급에 걸맞은 데이터가 어디서 얼마씩 나올지 그 측정도 없이 그냥 다른 사업에서 하는 것 중복적으로 20억짜리 하나, 10억짜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사업 내역도 실제로 살펴보면 이게 무슨 AI랑 관계가 있나 싶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금 요약해 주시면……

○최형두 위원 요약하자면 과기부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GPU 5만 장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바로 이 GPU 5만 장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만든다, 교육·의료·언론 이렇게 클라우드를 만든다는 이런 종합계획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보면 다른 부처에서 엉뚱하게 AI만 택같이한 게 많은데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걸 따질 때 국가인공지능위와 함께 ‘당신 부처에서 설계한 AI 사업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전체 국가 AI 진흥을 위한 이런 총지휘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플레이어도 됐다가 또 다른…… 이렇게 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최형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1000억 자체가 인프라 기본 기초를 닦는 거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보면 공공AI클라우드 관련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개발지원은 150억 그다음에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도 104억 또 AI연구용 컴퓨터 개발지원도 160억,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AI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GPU 같은 데이터센터도 필요하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과기부가 총괄 부서로서 모델을 만들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블록펀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블록펀딩은 사업계획에 지금 배정이 안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지금 계속과제로 20개가……

○박민규 위원 그러니까 블록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한테 한꺼번에 답아 주고……

○박민규 위원 한꺼번에 펀딩, 오케이. 그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보기에 최형두 위원님 말씀도 맞듯이 앞으로 과기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하시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최형두 위원 예, 감액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류했던 것을 다 묶어서 기재부와 함께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돈은 돈대로 쓰는데 어디 갔는지 다 증발되고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자료제출 요구요?

○조정훈 위원 여기도 특위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 한병도 여기서 그런 것도 하나요?

○조정훈 위원 예, 특위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제안드리는 게……

○소위원장 한병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

○조정훈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님이 부처에 해 주시는 거지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님, 통상……

○조정훈 위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잠시만요. 제가 운영에 대해서…… 수석님, 제가 아직은 소위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을 해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 준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마 소관 부처나 기재부에게 어떤 총괄적인 자료를 요청하려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정훈 위원 아까 최형두 위원님이나 박민규 위원님 등등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 예산의 가장 큰 꼭지 중의 하나가 AI 그리고 AX 관련된 예산임은 이틀 정도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부처도 예외 없이 부·처·청들이 다 AI·AX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AI·AX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총합해 주시고, 저희는 이것을 소위에서 하든지 소소위에서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위임하겠지만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보고 이게 적절한지, 중복되지 않는지, 분절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는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최종 결정하는, 그 예산을 결정하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게 각 부처별로 AI·AX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조정훈 위원 10조 얼마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노종면 위원 우리가 어제오늘 심사를 하다 보니까 AX 또는 AI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보류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결국은 또 논의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료가 준비가 되면 아예 몰아서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개별 건 항목 심사할 때는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흐름은 특별히 변화 없으니까요 회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나오면 계속 토론보다도 양쪽 의견 들어 보고 위원장이 그냥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중복돼서 제외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만, 딱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예결소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뿌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하면 AI 인재 육성 2조 이런 게 있었어요. 노동부에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차관한테 ‘우리나라 지금 AI를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요’, 그때 이미 AI 인재 엄청나게 키워 뒀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솔직히 그냥 돈 뿌리려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께서 그냥 대학생들한테 돈 나눠 주기 위해서 쓴 건데 뭐 그런 것을 따지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차라리 다른 돈으로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 인재를……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AI 인재를 기르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이런 게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것 어디 갔습니까, 다?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도 한말씀드리면 지금 AI나 AX 이게 굉장히 쟁점인데, 제 경험으로 옛날에 김대중 정부에서 인터넷 강국 한다고 할 때요 ‘저 미친놈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도대체 왜 여기에 예산 투자하냐, 아마 지금 AI와 AX 문제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든 것 중에,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세계적으로 그 인터넷의 논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그 저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여기가 옳고 낮고 맞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토론은 이번 기회에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저희들이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바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토론을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7번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입니다.

앞에서 논의하신 부처의 예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 세출에 감액사업 1건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자율계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반영돼 있는 충남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다른 세부사업인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에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10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이재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재관 위원님께서서는 단순히 10억 3000만 원을 여기서 감액하는 데 그

치지 말고 해당 금액을 그 바로 다음 페이지 2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자율) 사업
 맨 위의 칸의 그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 충남 공주시 경로당 내의 스마트주치의 서비스
 이런 보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재관
 위원님 의견은 증감의 연계 사업이 되므로 과기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과기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된, 다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일 지역 동일 금액을 이관하는 것으로서 이관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없으신가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해도 됩니까, 충남 공주 이런 특정 지역
 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특정 지역이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김대식 위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빼 가지고 부산 사상구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건 안 됩니다.

○김대식 위원 왜 안 돼? 똑같잖아요, 원리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자율계정이라서 그것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다 감액하고 이관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세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이전금 1억 4600만 원이 다른 세
 부사업인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세종계정) 사업에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또 다음 페이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해당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
 다.

증감의 연계이므로 과기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과기부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액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증감 연계하
 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일 계정 동일 지역 내에서 사업 변동입니다. 사업 변동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감액하고 동의하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페이지는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이걸 제가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61페이지 동일 사업 동일 금액을……

○소위원장 한병도 이백육십몇 페이지?

○조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런데 여기 문장에 의하면 동 사업에 편성된 1억 4600만 원이 다른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옮기기로 한 사업에 이미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미 중복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저쪽으로 넘기면 이중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기기로 한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세종) 사업이고 중복 편성된 사업은 261페이지에 나오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85페이지 기타 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한국나노기술원지원(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과기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유사기관과 동일하게 기관운영출연금 지원 형태로 사업 수행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기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과기부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상임위안대로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법 개정에 따른 비목 변경입니다. 비목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비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증액사업 1건입니다.

우체국 건립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입니다.

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에 우체국 건립사업 한도액 803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제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보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동 사업은 노후 우체국 건립을 기존 재정사업에서 새로운 BTL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정부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자적격성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BTL 한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과기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과학기술……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AI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한병도 그건요 어차피 저희들 이 소위 끝나면 소소위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그것 지금 다 토론이 됐기 때문에 토론된 내용 포함 저희들 소위에서 충분히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각 부처별 AI 예산 기재부가 제출해 주는 겁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걸 왜……

○강승규 위원 이걸 정리해서 소소위에서 하고, 저희 소소위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한번 정리해야 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해 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파악을 해서요 위원장에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입니다.

○우주항공청기획재정담당관 최진혁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최진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87페이지 우주항공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입니다.

과거 3년간 유사한 형태의 펀드가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운용 중으로 신규 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고 우주항공청이 우주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래 칸에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의 경우 우주청에서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증감 논의가 있었으나 기업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부안 유지로 최종 합의된 바 있습니다.

우주청이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내년 펀드예산 규모가 20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3800억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기업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황정아·이재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강승규 위원 짧게 하지요.

○임미애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기초성 펀드는 투자기간 5년 내에 원활하게 투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과 같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는 전 정부에서도 공표된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십시오.

끝났나요?

다음으로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AI펀드와도 좀 비슷한 측면을 먼저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다양한 통로로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로 AI·반도체 등과 함께 우주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 또는 펀드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우주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00억 원의 펀드를 구성해서 이렇게 또 매칭펀드를 만든다는 것이 중복 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성장펀드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1000억 원을 다시 펀드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방위에서 꽤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합의 처리된 항목이라서요.

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주항공청이 멀리서 왔습니다. 진짜 멀리서 왔어요, 사천에서 오셨는데.

이 펀드가 되면 주로 어느 쪽에 쓰입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 관련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투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2025년 결성 펀드는 아직 한 푼도 투자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23년에 50억……

○최형두 위원 2025년 것.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24년 50억, 25년 35억……

○최형두 위원 2023년 결성 금액은 40%, 24년 펀드는 35.4% 실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체 정부출자금 135억 원 중에 87억 원, 65%가 여전히 그냥 운용기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게 항상 예산심사 때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이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혹시 뭐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전망이나 현재 상황 전개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23년부터 저희가 투자기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평균 투자 집행률이 한 40%가 넘습니다. 42%가 되겠고요. 투자기간 경과율은 3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율 대비 투자 집행률이 사실 그것보다 많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5년 투자기간이 되겠고 나머지 5년은 상환기간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기금을 모아 가지고 24년에 그 돈을 투자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투자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26년 정부예산 1000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민간과 합쳐서 2000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투자받는 것은 아니고 26년 한 번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이고 이것을 가지고 5년 이상을 저희가 투자할 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는 3800억 원이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억 원이 모아질지라도 현재 벤처기업 수요조사 내용을 보면 그보다 못 미치는 액수라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위원님.

그래서 최형두 위원님, 원안 유지안에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김한규 위원 합의하신 거 아니에요?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상임위에서 합의했다고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지.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서 상임위에서는 합의해 주신……

○최형두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우주항공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청장님께서 아마 예산 사업을 잘…… 저는 5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제일 큰 시금석입니다, 예산 집행률. 집행률이 낮으면 계속 돈을 더 달라면 예산 낭비고, 그거는 집행실적 플러스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에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여기에서 도움이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단 제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건 궁금한 건데요. 25년도에 투자 금액이 없어요, 실적어.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조계원 위원 5년 안에……

○임미애 위원 아니, 그래서 1호 펀드, 2호 펀드는 그래도 이렇게 좀 투자 집행률이 있는데 3호 펀드가 투자 집행률이 없어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3호 펀드 25년도에 35억 정부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임미애 위원 이게 추정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아닙니다. 정부안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투자사를 25년도에 찾아서 그 금액은 26년도에 일반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씩 지연이 돼서 그 해 기금은 그다음 해에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네요.

○조계원 위원 투자기간 경과율이 30.8% 대비해서 투자 달성률이 42.1%니까 12% 이상 더 투자가 효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노종면 위원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맞습니다. 시간 경과에 비해서 투자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노종면 위원 원안 유지해 주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천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경상도 사천에서 올라왔다고……

○노종면 위원 소위의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겠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다 보류를 하니까…… 이 정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설득이 됐으면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를 왜 하는지 진짜……

○강승규 위원 제가 아까 저기 했지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주요 투자 분야 중에 우주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1000억을 또 우주항공청에서 신규 펀드 만드는 것과 어떻게 이게 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셔야지요. 나중에 국민성장펀드는 우주항공 분야의 어떤 분야를 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국민성장펀드는 우주 플러스 방산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의 펀드고……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우주·방산·AI 다 들어가는데 우주 분야가 주요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150조 원에 6~7개가 주요 분야면 몇십조가 우주 분야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 펀드 1000억을 여기다 또 왜 만드냐는 거지요, 거기에 150조 원이나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저희가 이번 사업이, 현재 지금 언급드린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우주에 해당하는……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국민성장펀드는 우주에다 그러면…… 우주는 다른 우주입니

까, 그거는? 어나더 우주예요? 뉴스페이스는 우주고 거기는 올드스페이스예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국민성장펀드는 우주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우주보다는 방산……

○강승규 위원 아니, 국민성장펀드가 하고 있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주도 큰 축이라니까요. 그 우주는 다른 우주냐니까요.

○김한규 위원 그래도 AI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제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노종면 위원 정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조정훈 위원 그런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강승규 위원 설명돼야 되지요. 나중에 국민성장펀드는 뭐 할 거예요?

○노종면 위원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지금 방산 말씀하신 게 그냥 단순한 기술개발이나 부품개발이나, 우주로 가려고 해도 이만한 부품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의 스타트업 발굴하고 그런 것을 하려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는 그게 아니라 한 사업에 몇천억,조를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고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답답하게 그런 설명을 못 하십니까?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우주산업에서 메가와 미니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로 우주 분야에 투자한다, 앞으로 어떤 투자 분야가 있어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비교적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주로 하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우주 펀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국민성장펀드에서 할 만한 우주산업, 우주 분야에서 투자 분야 어디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서 하려는 것과 차별화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면. 달나라 프로젝트 할 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사업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증액 사업 1건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사업 민간제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입니다. 26년도 민간제안 임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사업 한도액 437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주항공청과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항공청 말씀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견이 없기에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증액.

기재부 말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증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우주항공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우주항공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청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 청장님,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저희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 김영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07페이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사업에 대해 해외사업자 협조 없이는 매출액 자료 등 확인이 불가능하고 위법 발생 여부 등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확대·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내역사업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이미 이 운영비를 활용해서 사례집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6년 예산안에 사례집 제작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우리 기관은 2건의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08페이지 2번 법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자문비가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4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방미통위의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10억 4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인건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므로 4억 원 감액의견과 1억 54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은 방미통위와 업무 중복,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5억 6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므로 1억 원 감액의견과 72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상임위의 감액의견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AI 관련 다큐멘터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AI 열풍에 편승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 사업 예산 310억 8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AI 관련 다큐멘터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적어도 50% 이상 삭감돼야 하므로 7억 원 감액의견과 6억 원 감액의견이 있고, 아래 칸에 50억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7억 감액안으로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지적을 감안하여 AI 다큐멘터리의 제작 단가와 편수를 일부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아니, 제가 부처에 의견을 여쭙보고 싶은 게, AI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게 뭐가 문제기에 편수를 조정한다고 지금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조정훈 위원** 단가가 비싸게 잡혔다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산이 크게 AI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고 그리고 AI 실무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실무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원 감액을 하고 AI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당초 10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6억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50억 증액을 의결한 거 아니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상임위에서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셔서 이렇게 50억 증액이 의결된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EBS와 협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하고 지금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상임위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상임위에 제가 있었는데……

최형두입니다.

이미 큰 예산에서, 사실 오늘 여기는 안 다루는데 TBS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서 다루게 되지요?

○노종면 위원 그것은 문체부.

○최형두 위원 아, 문체부에서 다뤄야 됩니까?

그런 큰 쟁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당시 지적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과기부의 AX 사업에 대해서만 표결까지 갔고 그것도 사실 전체 과기부 예산 때는 따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을 밝히는 걸로 해서 했고.

이 문제도 세세하게 이견이 있었는데 당시 EBS라는 주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쟁을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EBS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영어로 제작된 방송이에요. 그게 한글 더빙 하는 방송인데, 아주 훌륭한 방송인데 왜 그런 걸 외국 판매를 많이 못 했느냐, 마케팅을 강화하고 하는 이런 점은 여야가 다 공감을 했고.

이것은 편수에 보면은 하나당 10억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작위적으로 그냥 편성했던 그게 있다라는 정도로 서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압도적인 일치 의견으로 합의돼서 의결된 건 아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작 편수에 대한, 제작비 부풀리기가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강승규 위원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하겠다……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부처가 수용한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께서도 증액 의견이 있으니 보류해서 증액 의견 포함 논의를 하자는…… 증액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액과 감액이 있으니까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종면 위원 하나만 확인하면, EBS는 본인들이 과도하게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세워 감액하는 데 동의한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일부 조정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상임위 결정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지요.

○송기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송기현 위원 이게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로 그렇지요? 프로그램 제작지원 비용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25년도에 비교해서 26년도에는. 그게 왜,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 비슷비슷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똑같고 그다음에 TV 프로그램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그쪽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늘린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설명을 잘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류로 넘어가시지요. 상임위는 증액을 요구하고 부처는 ‘7억 감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한 가지 기록을 위해서, 제가 낸 전액 감액 의견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이거 철회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약간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액 삭제를 하셔서 가지고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20페이지의 4번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과 321페이지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에 대한 동일한 지적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업은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4번 사업에 대해서는 110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5번 사업에 대해서는 47억 3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이므로 방미통위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각 이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은 단순 감액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회계의 증액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증액 심사하실 때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문체부 증액 사업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게 문체부 일반회계 그거 말씀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소관기관은 문체부인데 예산지원기관이 방미통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문체부에서 방미통위로 넘어간다는, 사업 부서가 그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소관기관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방통위 지원에서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문체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냐라는 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부처의 의견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부서가 넘어가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예결 위원이신 이훈기 위원님이 정책질의 때 질의를 하셨던 내용 있어서 그 취지는 이런 주장이신 건데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이 문체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소관기관을 문체부로 하는 방송사인데 두 회사에 대한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의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방발기금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두 기관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을 좀 더 지원하고 이거는 문체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정책질의 때 하셨던 내용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해마다 늘 문제가 돼서요, 원래 지난해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걸로 다 합의가 됐는데 지난해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됐던 겁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22페이지입니다. 6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건비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이므로 방미통위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감액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방위에서 논의할 때 감액된 부분을 일반회계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과 협의한 결과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의 방미통위의 본부 인건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똑같은 사업 내용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금과 회

계 간의 변경만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33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World Best LLM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중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만 이관되었으므로 사업명을 ‘K-미디어 AI 전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미통위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새로운 사업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사업명 변경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원자력안전위원회 3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입,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정부담금 수입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27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35페이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 감·증액 사업 1건입니다.

원안위 마지막 심사대상 사업입니다.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적·행정적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70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이 사업은 기술적·행정적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5억 3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3억 1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김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철회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철회하셨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관련된 감액 주장에 대해 철회를 하셨다고요?

○이소영 위원 위엿것만.

○조정훈 위원 전액 철회는 아니고 부분 철회만 유지.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위엿것, IT기반 방사선기기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336쪽 5억 34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것은, 동 사업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근로자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가 법령을 준수하는 데 편의성을 높여서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세요,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 건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의 증액 의견도 있는 상황이어서 보류하고 논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원안위 종료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분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송기현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조정훈 최형두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기획조정관 이재형

기획재정담당관 최진혁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획조정관 홍미루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기선

대변인 정재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대변인 서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최수진